

2·28의 화불

2002 / 12

제2권 4호 통권 8호

시 론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기획특집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민적 합의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대북정책
대구·경북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안
중앙의 문화독재에서 지역적 문화 민주주의로
지방분권협약 실천을 기대하며

지역쟁점 낙동강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대구를 항구도시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근 하 신 년

지난 한해 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의
후의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께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아침

신년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조해녕 · 홍종흠 배상

2·28의 햇불

2002년 12월 / 제2권 4호 통권 8호 기간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사본

4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 김달웅 경북대학교 총장

기획특집 / 대통령 당선자에게

- 6 국민적 합의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대북정책 /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12 대구·경북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언 / 심충택 영남일보 경제부장
16 중앙의 문화독재에서 지역적 문화 민주주의로 / 최현목 극작연출가
21 지방분권협약 실천을 기대하며 / 조순재 대구대학교 교수

지역칼럼

- 25 대구를 항구도시로! / 서찬수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8 시간과 인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 김충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탐방

31 대구청소년문화센터 우리세상

분야탐방

- 33 수필 - 마음의 면류관(冕旒冠) / 김규련 영남수필문학회장
36 시 - 하얼빈 / 문무학 시민영남일보논설위원

자유기고

- 37 다시 보는 대구 선거사 / 김일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위원
42 최후의 유리천장, 여성대통령 / 김병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일지

46 일지

임의 인사

- 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측은 여러분의 정성은 2·28정신의 계승 발전과 우리 나라 21세기 민주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2·28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회원명단은 영구히 전산암호로 보존됩니다.
(회선 1,000원, 개인 10,000원, 단체 100,000원)
-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8-05-002254-2 (사)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 본 법인에 납부하시는 후원 및 협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있어 국세의 기부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재정경제부공고 제2001-54호)

2·28의 햇불 2002년 9월

제2권 3호 통권 7호 기간

발행인 / 홍종홍 편집인 / 박재건

발행일 / 2002년 12월 31일

편집주간 / 오영근

편집위원 / 공광주 공상숙 공약수 김승도 김일수

공덕일 박명철 박영봉 박순대 박진호

박태호 신순걸 이영용 유진은 이병현

이상규 이완식 장동익 장영형

정서식 허종호

발행처 / 서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701-013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4-1(대구은행 신암동지점 2층)

TEL : (053)943-0228, 959-2862

FAX : (053)959-2860

E-mail : 228demo@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228.or.kr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김달웅 | 경북대학교 총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 전체가 한바탕 흥역을 겪었다. 대통령 선거가 국민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와 당면한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명제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알아 온 정치 허무주의 혹은 정치 무관심에는 신뢰받지 못한 정치풍토에 많은 책임이 있다.

이제 대통령 당선자는 마음을 비우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5년 동안 살신성인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지 후보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가졌던 알력과 시기를 큰 틀 속에 하나로 묶고 갱신을 고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희망찬 21세기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러 통로를 거쳐서 이미 당선자에게도 전달되었다. 문제는 지금부터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하나 하나 실타래를 풀듯이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천력이다. 지방 국립대학 총장으로

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육자로서 나 또한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많은 바람이 있다.

산적한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선현들이 국가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민족적 의기와 자존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다. 근대화 이후만 하더라도 2·28과 4·19와 5·18, 그리고 6·10 항쟁에 이르기까지 국권회복과 이 나라 민주화라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많은 사람들이 열망했던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독립된 국가에서 국민들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후손에게 민족의 자존과 자긍심이 보존된 국토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하지만 지식정보화 사회에 진입한 지금까지도 우리는 세계사를 움직여 가는 일원으로서 당당히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 당선자는 지방분권에
분명한 실천력을 보여 주어야 하며
지방분권운동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피폐해진 지방을 살리는 '나라살리기 운동'이다

비근한 예로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두 여중생에 대한 추모 시위로 국토 전체가 술렁였던 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존을 지키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대통령 당선자는 지금부터라도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며, 나아가 평등과 자존이 살아 숨쉬는 국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기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이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지방분권에 대한 분명한 실천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 지방분권운동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피폐해진 지방을 살리는 '나라살리기 운동'이다. 대통령 당

선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분명히 했다. 지방은 이제 더 이상 중앙의 들러리가 아니다. 특히 오늘날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의 육성과 인재의 지역할당 등 교육을 지렛대로 하는 지방발전 방안은 매우 시급하다. 우리 지역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가 열렸고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되는지 국민은 지속적으로 지켜 볼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당선자가 누가 될 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누가 되든 간에 민족의 의기를 높이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한 길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

국민적 합의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대북정책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탄생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대중 정부는 어느덧 지는 해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있다. “3김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사형수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40여년 영욕의 세월을 보낸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보통사람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자고로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역사 뒤에는 늘 위대한 지도자의 해안과 숭선수범이 있었다. 국가 위기를 미리 예견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벤구리온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덕망과 능력 있는 사람을 동용하고(任賢能), 국민의 군대를 길러야 한다(養軍民)”고 설과했던 이율곡 같은 병조판서가 없었다면, 조선조는 500년을 지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찍부터 경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경제 개발에 나섰던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한국의 국제위상은 현재와 같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초입에 들어선 한국이 요구하는 지도자상은 어떤 것일까. 한 마디로 기본덕목과 정책비전을 갖춘 지도자일 것이다. 기본덕목에 속하는 것들로는 애국심, 청렴성, 정직성, 용인술 등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덕목은 애국심일 것이다. 정책비전은 역시 못지 않게 중요하다. 주위를 둘러볼 때 대한민국만큼 지도자의 정

책비전을 요구하는 나라도 드물다. 나라의 형편만을 놓고 따진다면, 대한민국은 안보 대통령,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세 명의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어느 것 하나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수많은 정책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안보요, 경제요, 통일인 것이다. 이러한 근본이 잘 될 때 나라는 평안하다(本固邦寧). 이런 의미에서 대북정책은 국가 근본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분야이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확실한 소신과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북정책에 임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햇볕정책 5년에 대한 반성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새 정부의 대북정책도 과거 정책의 장단점을 반추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새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펼쳐졌던 햇볕정책에 대한 공과를 서슴 없이 따질 수 있어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이란 김대중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과거에도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접촉을 유지했으며, 1972년의 「7·4 공동선언」, 1991년의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은 그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포용정책이란 과거부터 존재했던 대

북정책으로서,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한 당연한 정책적 시도였다. 남북한 공존공영과 평화적 통일이 민족의 최대과제인 만큼 이를 실현하려 한 것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무수한 문제점을 노정했다.

① 정책수립 과정의 투명성 부족: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통령 본인과 임동원, 박지원 등 최측근 인사로 구성된 폐쇄적인 정책결정 서클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임동원의 경우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특보 등 요직을 거치면서 햇볕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반대의견을 내는 인사들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상 정책결정 과정을 독점화·확립화했다. 이러한 폐쇄성이 남북간 뒷거래설 등을 잉태시킨 토양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② 국민적 합의 부족: 햇볕정책은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절차를 무시한 정책이었다.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구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나, 여론의 향배를 확인하는 절차나 국회동의 같은 것을 생략해 다원적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다. 민주국가에서 정책이란 결국 다수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햇볕정책은 실행과정에서 많은 비민주적 요소를 노출했다.

③ 정책 선택폭 축소: 김대중 정부는 “포용”을 대북 유화정책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이에 집착함으로써 스스로 정책의 선택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고위 공직자들이 한 방향의 정책만을 공언함에 따라 다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에도 이를 어렵게 했으며, 이

로써 대북 협상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북한이 남한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햇볕정책의 기초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자유롭게 도발을 자행할 수 있는 여건을 의미했다. 2002년 서해교전 직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불변” 천명은 좋은 예이다.

④ 북한변화 유도 한계: 대북지원의 비등가성이나 비동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오만과 내정간섭을 자초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다. 북한은 지원받을 실고 간 남한의 선박을 억류하는 등 오만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남한 적십자총재와 통일부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내정간섭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민간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남한정부가 보증할 것을 요구한 것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호호혜성과 상호존중이 지켜질 때 건전하고 지속적인 쌍방대화가 유지된다는 국제관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자세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⑤ 안보태세 약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대북 포용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공약과는 달리, 국방안보 부분이 햇볕정책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안보태세가 약화되었다. 국가생존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정원이 햇볕정책을 수행하는 일에 나섬에 따라 대공기능 및 정보력은 저하되었으며, 2001년 북한 상선들의 영해침범 사건이나 2002년 서해교전 사태에서 보듯 도발에 대한 군의 우유부단한 대응은 국민적 우려를 자아냈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안보에 임해야 할 군의 고위직들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나치게 의식함에 따라 군에서의 주적개념은 희석되었다.

⑥ 국가정체성 및 주권에 대한 위협 방지: 햇볕 정책이 노출한 최대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남북관계 진전을 중시한 나머지 국가정체성 및 주권손상을 방치한 사례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한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다'라는 6·15 공동선언 제2항은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방안부터 먼저 합의한 것이 되어 국가정체성과 관련한 혼란이 불가피했다.

북한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기간동안 금강산댐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척시키고 남한으로 흘러가는 수자원을 절취하여 동해로 흐르게 했음에도 한국정부는 여기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의 전쟁행위에 준하는 것임에도 한국정부는 금강산댐 붕괴시 홍수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러한 논의에는 본질문제인 주권손상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유사하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반세기 동안 준수되어 온 북방한계선을 "분쟁대상"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셈이다. 서해 북방한계선이 붕괴될 경우 수도서울은 북쪽으로부터의 미사일 및 방사포 위협에 더하여 측방이 노출되는 전략적 취약점을 안게 되어, 수도방어 전략개념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북한의 주권침해 대해 "새로운 기정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대화에 임해야 할 정부로서는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⑦ 남남갈등 심화: 햇볕정책이 사회 내부에 남긴 최대의 상처는 깊어진 남남갈등의 골이라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의 부상과 함께 등장한 개혁성

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분법적 접근을 선호하면서 북한에 대해 경계론을 펴는 인사들을 "수구세력" 또는 "냉전세력"으로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자유시민연대」,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비전한국」, 「미래포럼」 등 다양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출현했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이들이 벌인 논쟁의 내용이나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생각할 때 개혁성향의 운동세력들이 햇볕에 끼친 영향은 오히려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⑧ 대량살상무기 문제 외면: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실시한 5년 동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사실상 외면했다. 남북관계에 장애물이 될 것을 우려하여 「관도라의 상자」로 취급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민족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은 후세와 다음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요컨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전례없는 남북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생각할 때, 남북간 교류협력은 앞으로도 증진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햇볕정책은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제 새 정부는 이러한 오류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기관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원래의 소임을 다해야 하며, 남북대화와 교류를 담당하는 부처와 안보를 담당하는 부처간의 역할분담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새 정부의 대북인식

새 정부는 우선 현실적 시각으로 북한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우리가 공존을 원하는 파트너이자 통일의 동반자이며, 이와 동시에 과거 남침전쟁을 저질렀으며 아직도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파트너로서의 얼굴과 안보위협으로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지도자는 북한이 가진 두 모습에 대해 균형적인 감각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두 얼굴에 대해 혼란을 느끼지 않고 양쪽 모두에 대해 차분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남북대화나 화해협력을 증진함에 있어 냉전적 안보논리만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대화의 문을 개방하고 북한의 변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남북한 합의나 실시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안보란 통일의 순간까지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변화노력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 지나친 낙관론이나 지나친 비관론은 금물이다. 북한은 2002년 7월 이후 배급제의 상당부분 포기, 임금 및 환율 현실화, 개인 영리활동 확대, 신의주 특구 지정 등 일련의 변화노력을 보이고 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 앞서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고백한 것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으로 단정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 지도부가 아직도 자본주의 확산을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는 많다. 중국이 1978년

개방과 개혁을 시작하면서 동소평 스스로가 개혁의 설계사가 되어 해안지역에 경제특구들을 지정하고 자본주의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데 비하면, 신의주 들레에 철조망을 치고 있는 북한의 특구는 다분히 "방충망식"이다. 북한의 통치체제와 이념체제에도 변화가 없다. 강성대국 건설과 주체사상은 여전히 북한의 통치이념이 되고 있으며,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천명한 '강성대국 건설'은 정치사상 강국, 군사력 강국, 경제력 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전히 경제보다는 사상과 군대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컨대, 북한의 변화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현 지배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식량난과 경제회생을 도모하는 체제유지적 시도로 봐야할 측면이 많다.

안보와 관련한 대북인식에도 착오가 있어서 안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북한은 여전히 [대병력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120만 정규군과 650만명의 정규군에 가까운 예비병력(노동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교도대, 인민경비대)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이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으나, 북한군은 여전히 양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한이 보유할 수 없는 핵, 화생무기, 장거리 미사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비대칭 군비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선제공격으로 남한에 끼칠 수 있는 피해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북한은 남한의 서울을 지척에 두는 유리한 지전략적(geostrategic) 강점을 이용하는 속전속결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햇볕정책 이후 활발한 남북교류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 북한의 속전속결 전략은 ① 선제공격능력 능력 유

지, ② 고속 기동전력 유지, ③ 지·공·해 입체작전을 통한 남한전역 동시전장화 등을 요체로 하고 있다. 선제공습 공격능력을 위해 북한은 전체 군사력의 65%를 평원선 이남에 집중배치하고 있으며, 개성부근에 서울을 사정권내에 두는 240mm 방사포나 170mm 자주포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다. 고속 기동능력을 위해 북한은 전차, 장갑차, 탱크 등 기계화 부대를 강화해왔으며, 이들은 유사시 고속으로 전선을 돌파하여 한반도 중심을 따라 돌진하게 된다. 남한전역의 동시전장화를 위해 북한은 10만에 달하는 특수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사시 땅굴을 통해 또는 AN-2기나 공기 부양정에 탑승하여 남한에 투입되도록 훈련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이러한 군사태세가 곧 전쟁을 유발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21세기 한국의 지도자라면 북한이 보유한 능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

이상과 같은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초 위에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접촉유지: 원래 "engagement"란 유화정책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필요시 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화책과 강경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곧 협력적 관계든 대결적 관계든 일단 대화와 접촉의 창구를 개방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되 대화만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표방하여 스스로 선택폭을 좁히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접촉유지" 정책을 하나의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다.

② 기존 합의사항 및 진행중인 협력 계승: 가능한 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합의들은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정부가 진행한 대북협상도 승계되는 것이 마땅하다.

③ 신축적 상호주의: 경제력이 서로 다른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있어 완벽한 상호주의를 기대함은 무리이다. 따라서, 새 정부로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하되 반드시 동가성만을 고집하지는 않는 신축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④ 전향적인 대화정책과 확고한 안보정책 병행: 북한의 두 얼굴을 감안할 때 화해협력과 안보는 반드시 잡아야 할 두 마리의 토끼이다. 21세기 한국의 지도자는 민족의 과제인 평화공존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되 만약의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충만해야 한다. 이것이 전쟁 없이 민족공영을 추구하는 길이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자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주적개념이 필요한 이유도 간단하다. 군대라는 것은 전투력과 사기를 유지해야 존재가치를 가지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교류협력이 진전되어 군사긴장이 해소되면 주적개념도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자고로 군대란 군대다워야 한다. "햇볕정책에 고개숙인 군대"는 필요치 않다.

⑤ 대량살상무기 대처: 최근 다시 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를 조망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핵, 화학무기, 미사일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문제만을 또는 핵문제의 일부인 우라늄농축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일회일비하는 식

은 곤란하다. 한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중단시킬 실질적인 지렛대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공조를 모색하는 당연하며,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대상으로 장단기 해결과제를 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평화적 해결을 거부할 경우 현금지원 중단을 포함하는 대북정책 재고가 불가피함을 천명할 필요도 있다.

⑥ 조화와 균형: 대북정책은 남북한 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결실이 가능한 국제정책의 성격을 띄고 있다. 아울러, 한국사회 내부로부터도 대체적인 합의를 얻어내야만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정국의 입장을 중시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북한만을 의식하는 대북정책은 주변국의 반발이나 미국의 저항을 초래하며, 미국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대북정책은 통일지향성을 결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논리나 성향에 경도된 대북정책은 내부혼란을 초래한다.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민족논리나 통일지상론에 경도될 때 현실론적인 정책처방이 나오기 어렵다. 21세기 한국의 지도자는 국제정책으로서의 대북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각국의 입장과 다양한 내부의견을 적절히 수렴하는 최대공약수적인 정책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맺는 말

분단국인 한국의 새 대통령이 떠맡아야 할 대북정책 과제는 산적해 있다.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책기조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과목일 뿐이다. 국방정책, 대미정책, 대주변국 정책과의 조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다른 기본과목일 것이다. 각론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고 정책들이 새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수로 공사는 지속해야 하는가, 탈북자 문제는 이대로 좋은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 등등 모두가 민족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들이다. 그러나, 정책은 결국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도 대통령 당선자가 어떤 소신과 덕목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또는 어떤 사람들을 중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실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프랑스의 드골은 그 자신이 탁월한 전략가이자 애국자였다. 나약해진 조국의 모습에 울분을 품고 핵개발에 착수했던 드골은 강대한 프랑스를 재건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은퇴 후 국가가 제공하는 일체의 예우를 사양하고 외롭게 고향마을에서 여생을 마쳤다.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수상도 정착촌 건설을 강행한 여결 수상이었으며, 은퇴 후 13평 정착촌집에서 여생을 마쳤다.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유비는 20세 연하인 제갈공명을 찾아가 삼고초려를 했으며, 제갈공명은 지연, 혈연, 학연과 무관한 도외인 중에서 인재를 찾는 것을 인사정책의 으뜸으로 삼아 나라를 크게 융성하게 만들었다. 원나라 대신 조인천은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덕망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재능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고 설파했다.

한국의 새 대통령도 드골과 골다 메이어의 애국심과 전문성을 가진 분하기를 기대한다. 제갈공명이나 조인천의 용인술을 발휘해줄 것으로 믿고 싶다. 투철한 정책소신과 애국심으로 헌신하면서 널리 인재들을 불러모으는 그런 새 대통령을 보고 싶다.

대구·경북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언

심충택 | 영남일보 경제부장

현장 체감경기

새해 2월이면 청와대에 이사하실 대통령이 집권 후 즉시 단행해야 할 국가적 과제는 어느 정권보다도 많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방경제로 요약되는 21세기를 맞아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개방과 경제협력, 대내적으로는 교육·고용문제, 금융·기업 구조조정, 국토의 균형개발, 농어촌개발 등 어느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없는 현안이 장애물처럼 눈 앞에 놓여있다. 대통령이 어떤 과제를 국정목표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한국 번영의 키워드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모든 현안에 앞서 국민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 전에도 강조됐다고 국민통합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사람과 돈이 중앙에 몰려 나타나는 지방민들의 소외이다. 지방은 이제 공동화되어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황폐화되고 있다.

특히 개발시대의 메카였던 대구·경북은 모든 여건이 더 이상 추락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11월 초 금융감독원에 의해 단행된 신용협동조합 퇴출 때 전체 115개 퇴출조합 중 대구·경북이 38개를 차지했다.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대구·경북 경제상황이 몹시 심각함을 반영해 주고 있다.

대구지역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통계치보다 산업현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직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더 좋을 듯 하다. 중소기업인 이야기부터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 부품 및 용품을 생산하는 대구 H정공 간부의 얘기이다. IMF 당시 보다 기업경영이 더 어렵다. 매출액은 지난해의 45% 수준으로 떨어졌고, 공장 가동률은 75%에 이르는데, 재고는 누적되고 있다. 그래도 단축작업을 하지 못한다. 가뜩이나 저임금이라서 작업을 줄이면 근로자들은 생계가 곤란해진다.

또 한 기업인은 취업난 속의 구인난에 대해 말하고 있다. "기업경영도 어렵지만 최근 직원 3명을 구하는데 여러번 광고를 내야 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그나마 젊은 사람은 없고, 대부분 50대 초반이나 중반의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처럼 기업경영이 어려워지자 '힘이 들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는 한파는 대구지역 주력 업종인 섬유 쪽에서는 더욱 심합니다.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생산하는 한 섬유회사 사장의 얘기이다. "그나마 수출업체는 낫다. 내수에 치중하는 업체들은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자 대구지역의 G사 등 중견업체들이 해외 덩핑판매로 다른 업체들의 신규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업체간 제살 깎아먹기 현상까지 발

생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해의 80% 수준으로 매출액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기술개발, 시설투자에 힘써 경쟁력 있는 신제품들을 생산해 수출 쪽으로 활로를 개척해내고 있다. 그러나 신제품이 없는 기업은 중국 등과의 경쟁에 밀려 수출에서 뒤질 수밖에 없어 더욱 곤욕을 치르는 것 같다. 섬유기업인들이 '섬유는 이제 갔다'면서 '있는 시설 돌려먹고 땅 값 올랐을 때 공장 팔고 전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섬유업계 역시 인력난이 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M사의 한 간부는 "적정 인원을 다 채워본지가 몇 년 됐다.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직원들은 기술이 없거나 금방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주변 소개로 충원하고 있다"며 인력시장 왜곡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중견 섬유수출업체인 K사가 200억원 대의 부도를 내고 기업주가 해외도피한 것을 비롯해 직물업체인 H, S사의 사장도 몰래 직기를 매각하고 부도 후 잠적했다. 이처럼 사업의욕을 잃거나 경영에 실패한 기업인들의 야반도주가 끊이지 않아 냉각된 섬유업계 분위기가 더욱 위중해져 있다.

다음은 대구의 식당이나 술집, 시장의 체감경기를 들어보자. 대구 시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중구 대봉동 대백프라자 근처 추어탕, 고디탕 식당 주인을 만나보았다. "요즘들어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줄어들고 있다. 또 한번 IMF가 오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판인데 파리만 날리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다. 이 근처에서 장사가 잘 되던 집들은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현상유지만 하던 집들은 아예 손님이 없다."

횃값이 비교적 싸 손님이 많이 몰리는 동구 신천동 KBS 대구방송국 건너편 횃집거리의 한 가게 주

인은 "요즘처럼 손님이 드문 것은 10년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며 한숨을 짓고 있다. 제래시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어물이나 과일, 채소 도매상 역할을 하며 항상 사람이 북적대던 칠성시장은 요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산하다. 어물전 좌판을 열고있는 한 50대 아주머니는 지난 11월 인터뷰 당시 "지금 묘사장을 보는 시기이고 김장 준비철이라서 손님들이 많을 때인데, 시장 보러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은 백화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멋을 잘 내기로 유명한 대구의 아가씨들이 최근 들어서는 정상 상품을 멀리하고, 이월·기획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백화점 매출액 통계에 나와 있다. 의류나 구두 수선코너, 리필 제품을 찾는 복고풍 고객들도 이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부동산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자. 아파트 거래가 뜰 떨어진 것은 정부의 부동산 값 안정대책 탓이 아니다. 서울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방은 그 이전부터 거래가 별로 드물었다. 대구의 젓줄 신천 옆에 사는 송순애씨(여·45)의 얘기이다. "지난 9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놔는데, 석 달 채 임자를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소 여러 곳에 맡겼으나, 아직 문의전화 한번 없다. 값도 그리 높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경북도내 농어민 상황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빛과 일에 쪼들려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가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어민들이 국가가 만든 산업화라는 이데올로기를 탈피하고 자기자신의 몫을 주장할 때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공산품을 팔기 위해 무턱대고 농산물 수입시장을 개방하는 정부에 대해 농민회 회원들만 화를 내고 있는 줄 생각하면 잘못이다. 칠순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낙후의 원인

필자는 원래 통계치를 싫어해 신문기사를 쓸 때 도 가능한 한 통계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가 없으면 뭔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대구의 경제현황을 통계치로 제시하겠다. 대구·경북 주민들은 한 뿌리이고 아직까지 비슷한 의식을 공유하는 한 공동체이다. 학자들도 대구의 경제 통계치들로 대구·경북 전체 주민들의 삶을 분석해 내고 있다. 통계시점은 각기 다르지만 하여튼 가장 최근의 통계치들을 쓰겠다.

필자는 경제통계치들 중에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해 동안 얼마만큼 생산하면서 살았는가를 나타내주는 1인당 GDP를 가장 신뢰한다. 주민 생활 실태와 여건, 미래 비전까지 제시해주는 통계치이기 때문이다. 대구는 지난 2000년 한해 동안 1인당 672만원 상당을 생산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균치는 1천 65만원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63% 수준인데, 서울과 견주면 얼마나 차이가 크겠는가.

1인당 GDP는 전국 꼴찌지만 기분 나쁜 통계치들은 대구가 모두 전국 상위권을 땡크하고 있다. 지난 9월 자료를 보면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어음부도율은 1등, 실업률은 2등, 물가상승률은 3등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반야야 하는 부채는 또 어떤가. 자그마치 3조원에 이른다. 주민 1인당으로 환산해보면 116만원이니, 네 가족이 사는 가정이면 부담해야 할 액수가 5백만원을 육박한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대구에 눌러 사는 시민들에게 대구시장은 감사장이라도 줘야 할 판이다.

대구 of 이런 현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 표현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YS, DJ 정권을 거치면서, 대구·경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

로 후대를 받았다는 서운함, 지역민들이 뭔가 할 일을 안하고 가진 것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멍청하게 지냈다는 자조가 담겨 있다. 필자는 이 지역이 상실의 땅으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를 국가의 횡포로 보고 있다. 중요한 모든 것은 서울로 가져가 버리고, 지방에는 껍데기만 남겨두는데 어떻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빗더미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곳에 사는 어린이들마저 모두 서울만 쳐다보고 있다. 서울에 가야 출세하고 취직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강 이남의 최대 명문대학으로 꼽혔던 경북대 학생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저 지방 대학 범주에 넣어져 취직 추천서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공무원시험 쪽으로 몰린다. 국가는 이들을 상대로 불과 소수의 공무원을 선발할 뿐이다.

정치인이나 공무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구의 낙후 원인을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TK정서, 리더십의 부재와 분열, 내륙도시라는 지리적 여건, 신 산업 육성 지연 등으로 꼽고 있지만, 서민들은 여기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아이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 모든 돈을 교육비에 쏟아 붓고, 또 기꺼이 서울로 올려 보낸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허리를 펼 날이 오겠는가.

지역의 경제회복 방안

우선 서민들이 저축을 하면서 사는 재미를 좀 느끼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파일이 잘 팔리고 컴퓨터가 잘 팔리고,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벽화점도 번창하고, 공장도 잘 돌아가고, 기술개발도 잘되고, 연쇄적인 발전이 온다. 그러자면 국가가 가장 먼

저 할 일은 아이들 서울 안 보내도 출세하고 취직걱정없는 세상 만들기이다.

그 방법은 국가가 연구해야 할 엄청난 책무이다. 대구를 예로 든다면, 국가기관 한 두개쯤은 있고 대기업과 외국기업이 다수 있어서 지역출신 인문, 자연과학 분야 인재들을 뽑아줘야 한다. 그러면 금융이나 문화분야도 같이 발전해 고급인력 수요가 창출되고, 건설경기도 좋아져 서민들 삶이 윤택해 질 것이다.

이는 절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다. 국가기관 이전 문제부터 보자. 산업자원부 대구 이전 문제는 누차 제기되어온 사안이다. 정부에서 아마 검토를 한 서류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한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과 대구유치 문제는 벌써 대구시의 중대현안이 되어 있으며, 설립방법과 장소선정까지 모두 끝마쳤다. 대구는 조선시대 때부터 한약재 시장으로 유명하고, 지금도 약전골목은 전국 한약재의 도매상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국가가 이제는 국민이 먹는 식품, 의약품 감독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 다음은 대기업과 외국기업 유치 문제이다. 이들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저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지방에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독려를 요청한다.

현재 대구시는 달성군 일원 570만 평에 5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첨단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고, 벌써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예산까지 반영해 뒀다. 낙동강변에 사는 부산·경남 주민들의 반대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안돼 차선책으로 세운 친환경적 사업계획이다. 대구시는 이곳에 국내 첨단기업체를 유치하고 외국인 전용공단도 만들 예정이다. 예를들어, 대구과학기술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과 첨단교육기관도 만들 생각이다. 대구에는 이곳 말고

대기업과 외국기업이 들어설 땅이 없다. 낙동강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이곳이 계획대로 개발되면, 대구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대구 전체의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다.

중요한 숙제가 또 있다. 대구는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각 도시들이 경쟁하는 시대를 맞아 불리한 점이 많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이를 극복하는데 시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안과의 공간을 좁히기 위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독려하고 있고, 낙동강 프로젝트 속에 구미-부산간 주운(운하)개발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또 이미 국제공항으로 지정된 대구공항의 국제항로 확대를 위해서도 총력을 쏟고 있는 줄 안다. 이러한 대구시 계획을 수용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대구에 기업체가 들어오고 외국인도 올 것이 아닌가.

마지막 부탁이 하나 더 있다. 내년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린다. 대구·경북 주민들로서는 처음 치르는 국제 행사이다. 대구·경북 주민들의 성향이 워낙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시민 성향을 바꿔볼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대구시도 지난 월드컵대회 때처럼 시민들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고, 시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내년 8월 대구가 국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기적을 만드는 데 정부도 참여해 주기 바란다.

유럽 국가의 벽이 허물어지듯이 오늘날은 국가의 경계가 사라지는 혼돈의 시대이다. 이를 달리 보면, 국가의 경계가 없어지고 국민정신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의 시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살기 힘든 도시나 국가를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세대가 언제 닥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정부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앙의 문화독재에서 지역적 문화 민주주의로

최 현 목 | 극작연출가

새로운 화두 : Glocalization

2002년 5월,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세계는 어떤 문화정책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국제 심포지엄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김경동 명예교수는 한국 문화정책 수립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조건부 자유방임의 원칙, 둘째, 문화발전에 있어서 지역 자율성의 원칙, 셋째, 문화정책에 있어서 인간의 중요성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두 번째로 제시한 '지역 자율성의 원칙'이라는 부분인데, 김교수는 여기서 "지역 사회는 중앙 센터를 뛰어넘어 세계 다른 지역과 연계를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있다. 소위 전지구지방화(glocalization)가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 문화와 밀접한 연계를 가진, 전적으로 자율적인 지역 개발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말은, '세계화' 혹은 '지구화'라는 globalization와 '지방화'라는 localization, 그리고 '문화의 세기'라는 세 개의 화두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순 합성어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곧 지역의 독특함과 정체성이 세계 속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며, 그 전략의 출발은 문화적인 요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 단위 정

체성의 총합이 이루어낼 성과는, 한 마디로, 선진문화국가로의 도달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충분히 가 능태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 : 지역적 문화 독재주의

오늘날 주요 선진국의 문화정책의 동향은 예술을 위한 정책에서 문화 전반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주요 축이었던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의 장려 및 지원이라는 것 이외에, 일반인의 문화활동에 대한 참가 기회 확대, 지역문화육성, 문화 분야의 인재 양성과 교육,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문화의 국제교류와 국제 협력, 그리고 문화시설과 문화에 관한 제도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이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지역문화육성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아울러 이 부분의 강화야말로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나간 개발독재시대로부터 민주화 투쟁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정치나 경제 민주주의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민주주의 분야에 있어서는 전혀 진척된 바가 없다. 모든 문화의 창조·향수에 있

어서 공공성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인 바, 자본과 문화가 결합된 독점적 상황이 급팽창하고 있다. 수 십억이 들어가는 연극 한 편에는 각종 마스크와 홍보 매체가 잇따르고, 그에 상응하는 수 십 만원 입장료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문화 부르조아들이 몰려들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대학로 소극장 연극에는 제작비도, 언론의 관심도, 그리고 관객도 없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산동네 서민은 잠시 쉴 달리기 공간도 없는데, 국토의 산이란 산마다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더욱 큰 문제는, 지역간 문화적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지난 11월,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와 민족문학작가회의가 마련한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토론회'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 당시 문화예술인 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문화정책 중 실패적으로 꼽은 첫 번째가 지역문화 불균등 발전(27.4%)였다. 이러한 점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후보로 나선 유력 후보들의 문화정책에 대한 구체성이나 전문성뿐만 아니라 후보간 차별성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분석이고, 동시에 유력 후보 누구도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몰려있는 각종 문화시설 및 언론 매체, 그리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권력 기관들, 그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에워싸고 있는 문화예술 관계자, 그것이 지역적 문화 독재주의이며,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방에는 문화의 창조·향수자도 없고, 이들을 지원하고 후원해줄 재단이나 관련 기관조차 없다. 오직 관할 관청의 담당 부서만이 겨우 있을 뿐이다.

문화정책 - 지역에서 중앙으로

한국문화의 원형이 어디에 있는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상황이 한국문화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재 그들이 한국문화의 대표자들로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있지만, 영남의 유교와 불교문화, 그리고 호남의 풍류정신 등이 없이 오늘의 한국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 오랜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모이고 모여 오늘의 한국문화라고 지칭할 수 있는 형태가 생겨난 건 아닐까? 서울에서 활동하는 대다수 예술가들이 지방 출신임을 생각할 때, 그들의 정신적 원류가 어디에 있는가도 명확하다. 이와 같이 문화는 그 뿌리를 고향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며, 그러한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이 도시에서 부딪쳐 오늘날 한국의 현대문화를 형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가 고갈될 때, 한국문화의 샘플도 고갈된다.

1998년 8월, 일본의 문화청은 「문화진흥 마스터플랜: 문화입국 실현을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 문화입국의 필요성으로 지적한 중요한 두 개의 축은, 첫째 경제 발전과 정보화에 따른 국민의 문화적 요구, 둘째, 지역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진흥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다름아닌, 보다 높은 차원의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의 자양분이 된다는 실질적인 필요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이 주목한 것 역시, '전지구지방화(globalization)'가 아니었을까?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세계화를 풀어갈 수 있는 중요 과제이며, 이것을 통해 문화입국을 달성하고, 또 그 문화입국이야말로 미래 일본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를 정치나 경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나 경제를 문화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 눈이 되는 문화의 원천은 바로 지역에 있다.

지역 문화정책의 목표 : 지역적 문화 민주주의

역사적으로, 지역에 대한 문화정책 측면에서의 관심은 군사독재가 가장 악랄했던 1981년 1980년대 새문화정책과 1983년 지방문화진흥 5개년 계획에 시작된 바 있다. 그 이후에는 주요 정책과제 혹은 종합계획과 같은 형식으로 추진되었는 바, 94년에 새 문화·체육·청소년 진흥 5개년 계획과 96년에 추진된 문화도시 건설과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정책의 제가 바로 그것이다.

각 지역에 종합문화예술회관들이 건립된 것이 5공화국과 6공화국 시기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독재 정권하에서는 지역 문화에 대한 민주적 배분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 하면, 오히려 민주화 추진 세력에 의한 집권시기에는 중앙에 의한 문화 독재주의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문화정책의 목표는 지역적 문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적 문화 민주주의라 함은 지역적 문화 독재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각종 문화적 요소, 예를 들어, 시설, 인원, 매체, 예산, 의사 결정 구조, 교류 프로그램, 지원기관... 등의 배분을 통한 중앙과 지역간의 불균등이 해소하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보고서 및 정책, 즉 문예진흥원이 제시한 「문화비전 2000」,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문화정책백서 2001」과 「순수예술 진흥 종합계

획」... 등 어디를 봐도 지역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다. 만약 이러한 계획대로 문화와 문화예술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적 문화 독재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획 대부분이 중앙을 거점으로 한 문화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새로운 정부에서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상황은, 기존의 문화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해체,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 차원에서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정책을 통한 지역문화 육성 방안

지역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문화비전 2000에 버금가는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역 문화는 일부 지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21세기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항이다. 지방분권 10대 의제가 아직 20세기적인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때, 문화적 마인드로 지방분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21세기다운 지방분권이다.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별개로 추진 주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고, 그 설립 주체는 각 지역의 단위별 독립 주체와 수평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였던 대통령 직속 문화예술자문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이 아닌 '추진' 체제로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흔히 보는 위원회처럼, 중앙의 명망가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인사로 구성해야 하며, 동시에 각 지역의 인사들도 관을 통한 구성이 아닌, 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선임한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국책 연구기관과 문화 관련 연구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산업, IT 관련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지역문화 육성이, 단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의 차원이 아닌, 국가 미래가 달려 주요 과제를 국민 모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 육성의 중요한 방향은 H/W나 S/W가 아닌 Contents Ware, 즉 CW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 문화의 독특함과 정체성을 담아낸 작품, 시민문화 프로그램, 문화유산 관리 체계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의 관광 산업과 문화 산업의 정책과 연결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의 장기 발전 계획에 부응해야 한다. 즉, 정책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혜를 베푸는 문화정책이 아닌, 각 지역의 발전 계획을 '문화'라는 21세기 화두를 통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만이 21세기 무한경쟁사회에서 도약할 수 있는 국가 비전이자, 지역 발전의 탈출구이다. 만약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이 임기 5년에 국한된 것이라면, 각 지역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개선하는데 선심성 예산을 쏟아부을 것이며, 만약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이 몇 십 년을 내다보는 것이라면, 그러한 선심성 예산의 일부라도 지역문화 육성에 투입해야 한다.

이제 각 기초자치단체가 움직여야 한다. 종전에 지역문화 혹은 예술 진흥의 중심지는 광역 단체였다. 문예진흥 기금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각 기초단체마다 문화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이 설치되었지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예산의 부족으로 일 년 내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예산만 소비하며, 방치되는 경향이 많았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기획성 문화예술행사 및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는 하지만, 대다수 기초단체는 그러지 못한다. 특히 지방의 기초단체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는 최소 공공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좋을 것이며, 참여 문화예술인 역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로 가까이 사는 일반인과 예술가가 만나는 것, 그 자체로 문화 이벤트가 아닌가? 이 기회에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에 대한 새로운 중앙 정부 단위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 조심스럽게 재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요즘 시도되고 있는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민영화 방향이 그것이다.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민영화가, 정확히 어떤 결과를 빚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기능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시설의 운영 성과를 위해 지나치게 상업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일부 관변단체 혹은 예술인들 몇몇의 자리를 만들어주기로 가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기관의 형식은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높이고, 동시에 공공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공공성과 참신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행정 능력과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절대 필요하다. 현재 행정 분야에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영입되고는 있으나, 공무원 기존 조직체계 속으로 편입됨으로써 조직 논리에 갇히는 경향이 있음을 주목하고, 외부 전문가에 대한 권리와 책

임을 명확히 한, 독립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유럽식 예술감독제와 프로젝트별 책임감독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 민주주의 만세

지역적 문화 민주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문화 일체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중앙의 문화에 대한 입지 강화가 될 수가 있다. 어떤 분야든 그 대표성은 인정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의 문화는 그 대표성을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표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법, 그 기초는 바로 지방의 문화, 즉 각 지역의 문화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중앙과 지역간의 외형적 불균등의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문화의 독특함과 정체성이, 바로 지방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한국문화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역적 문화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문화 민주주의가 성취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전지구지방화(globalization),' 그 의미를 깨닫고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전 방향이 문화에 있다는 일차원적인 구호에 멈추지 말고, 그 명제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지역문화의 육성'이라는, 절대적인 인식이 요구된다.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에게는.

▼ 2·28기념공원 계획 조감도



[구, 대구중앙초등학교 자리에 조성되고 있는 2·28기념공원] 2003년 6월에 완공예정이다. (현재 70% 공사 진행 중)

지방분권협약 실천을 기대하며

조순재 | 대구대학교 교수

21세기 들어 처음 치러진 대선이 끝나고 '낡은 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치'를 제창한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지난 세월 군부독재와 3김 정치로 피폐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걸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60년대 이래 지난 40년 동안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정부에 의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차곡차곡 쌓여온 많은 사회적 갈등과 모순들이 서서히 표출되어 왔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시작되었던 강력한 중앙집권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형적인 경제 발전과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발전을 가져왔으며, 정치적으로 심각한 지역갈등을 유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세계화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과거의 관주도적, 중앙집권적, 하향식, 성장위주 패러다임으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21세기의 새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개혁을 요구받고 있으며, 분권은 이러한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내년 2월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바람직한 개혁 방향과 이에 기초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세대간의 대결이라는 점이 두드러졌지만, 오랫동안 선거판을 오염시켜온 지역구도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선거결과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어졌으며, 선거에서 표출된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권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새 정부가 이미 대선 공약에서 밝히고 지방분권운동본부와 협약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할 지방분권의 내용을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재설정, 둘째, 수도권집중의 완화, 셋째, 지역 내에서의 수평적 분권 문제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설정

분권의 우선적 과제는 민주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데 있다. 지방은 중앙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방논리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지역의 특수성 속에서 지방이 능동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 적용되는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지방중심의 논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하에서 형성되었던 서울중심주의가 타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정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첫째,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선단체장 등장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중앙과 지방

은 수직적, 종속적 상하관계로부터 수평적, 협조적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 관계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이양이 미흡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권한배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와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중앙정부의 태도로 양자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통제 감독함으로써 양자간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하급기관화 하는 폐단을 낳고 있으며, 권한분쟁, 책임회피 등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며, 조례제정권, 지방정부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정부의 진정한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무배분과 관련하여 주로 행정권의 사무배분만을 논하고 있으나, 이제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법권, 지방경찰제, 교육자치제 문제를 분권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둘째,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적용함으로써 민주성과 효율성 정착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 계층 구조는 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의 2계층이고, 지방행정 계층은 자치 계층에 읍·면·동을 더한 3계층 혹은 4계층 구조이다. 계층은 계층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정착과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 지방정부의 구역, 지방행정 조직, 주민참여 등과 관련을 맺고 있다. 지방 행정구조의 다층화, 자치 계층과 행정 계층의 불일치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지역간 공간적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내용별 광역행정의 문제, 지방정부간의 지역이기주의 문제, 읍·면·동 폐지 문제 등이 고려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율성 확보도 관심사항이다. 이는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이 자치제도 정착의 핵심요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자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종합토지세와 지방양여금제도 도입, 지역개발세 신설, 파표현실화,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조정, 재정융자금 확대,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등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여전히 두드러진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재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지방세원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심하며, 행정기능의 이양에 세원이양이 수반되지 않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정권을 강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① 지방소득세제 확대, ② 공동세제도 도입, ③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정비, ④ 보유세 강화와 재산과세 개선, ⑤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으로부터 지방분산으로

이번 대통령선거 토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후보들이 원본적으로 수도권에는 인구집중과 함께 자본, 정보, 중추관리 기능의 편중에 따른 지역불

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다. 항상 그렇듯이 다양한 접근들이 제시되는데, 근본적인 대안으로 여기기에는 부족하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때 올바른 방안 마련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비록 불안전하나마 토론을 거친 해답은 있었다.

먼저 행정수도 이전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전문가 자문과 오랜 검토를 거쳐야 하겠지만, 기대를 저버리서는 곤란하다. 과거에도 수도권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의 공공청사, 대학, 공장 등의 신설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을 뿐 질적으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굳이 얻은 것이라면 수도권의 유지 내지는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균형적인 구조로 변모시키고, 국토 및 지역의 고른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지방육성에 필요한 인센티브 및 추진기구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발전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지역혁신을 위한 클러스터(regional cluster) 형성 역시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대학 활성화가 더 없이 중요하다. 사회변화는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교육 또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 정보, 인적 연결망이 핵심자원이며,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의 발전은 이제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고 보유하는 지방대학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조적 모순인 지방

의 위기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로 이어져 결국 지역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발전 불균형의 누적적 순환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 인구비례로 지방대학 출신에게 할당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평적 분권: 지방정부와 주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더불어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직적 권력구조보다 수평적 분배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는 개혁의 대상을 사회 내 권력 재배분과 기능 재배분 문제로 확대하는 것이다. 세계화·정보화시대로의 진전에 따라 개방화하고 다원화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소수 전문가를 가진 정부가 독점적인 권력의 향수자로서 모든 문제를 권위적으로 해결하는 하려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 정부는 지역사회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도와주는 조력자, 기본질서의 수호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분권의 방향은 민간경제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이 정부를 대치하거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물론 수평적 분권의 주된 방법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이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에 있다. 따라서 분권의 기본방향도 민주성 제고에 두어야 하며, 이는 주민참여의 활성화 없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

거 참여만 제도화되어 있을 뿐 주민의 직접참여 풍
 로는 제한되어 있다. 현행법상의 주민참여제도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주민투표 및 청원제도가 있으
 며, 행정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을 이용한 참여
 도 가능하다. 그 밖의 참여수단으로는 민원실 이용,
 여론조사, 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반상회나 부녀회
 등을 들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시정(의정)
 감시단 구성이나, 시위, 집단서명 등 시민단체 활동
 을 통한 참여가 있다. 현행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은 주민투표제의 경우, 자치단체장만이 발의권을 갖
 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과 지방
 의회의 발의권이 없어 형평성을 결하고 있으며, 주
 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 조
 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청구조건
 을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실효성이 저하되
 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경우 청구인의 자격을
 시민단체에 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 내부감사로 국
 한시킴으로써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의 저변확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과 근린집단을
 통한 참여가 가장 유용한 수단 중 하나이다. 현행의
 광역자치단체 혹은 기초자치단체는 규모 면에서 주
 민의 직접참여가 매우 어려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근린집단 조직화가 필요한데,

이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달성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지방행정의 경영화와 관료기구 슬
 림화 실현이다. 비대해진 정부 기능과 권력을 기업
 과 시민단체로 분산함으로써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여 최종적인 만족이나
 행복감, 신뢰감 등의 가치를 공급하는 고객지향적 행
 정서비스를 지향하여야 한다. 지난 10여 년 간에 걸
 쳐 고객지향적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민·관 영역을
 지배해온 중심적인 가치의 하나이다. 고객위주의 사
 고가 중시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과거
 공급자위주의 산업사회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오랫동안 관료주의적 봉치구조를 발전
 시켜온 우리의 개혁과제는 단순히 조직개편 수준의
 행정 효율성 제고 차원이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지
 속적인 관계 속에서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수비범위도 축소·재조정해야 한다. 주민
 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
 부에서 담당하기보다는, 공공서비스공급의 적정판단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이러한 서비스 공
 급을 민간부문에 분산시켜야 하며, 규제행정은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를 항구도시로!

서 찬 수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희망과 몽상

무슨 등판지같은 소리가 싶겠지만 필자의 은사(권병탁 전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1994년 토목공학과 1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수업시간에 과제로 내준 1학기 리포트 제목이다. 그 때 선생님은 아마도 수업시간 중에 일제시대 이전까지의 낙동강 수운에 대한 기록, 운하의 외국 사례, 대학생으로서 차세대를 짊어지고 가야할 사명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초대형 토목공사인 운하를 담당할 그들에게 상찬할 기회를 주고, 꿈을 심어주기 위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경부선 철도부설에 따라 그들의 공업제품이 물밀 듯이 밀려와 우리나라의 공업발전의 싹이 짓밟히고 쌀 등의 농산물이 일제로 유출되기까지 낙동강은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다. 소금과 수산물이 배를 통해 안동까지 올라오고, 곡물과 각종 현물세금이 내려갔으며, 고령의 사문진과 대구의 강창이 그 항구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 놀라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지방에서도 물 위지역과 물 아래 지역간 활발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반해 17개 나라를 걸쳐 흐르는 다뉴브강이 국가간 협약에 의해 친환경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 때의 리포트를 영인하여 선생님과 필자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쓰기 위해 새삼 꺼내 읽어보니 지금과 마찬가지로 황당하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참신한 발상이라는 감탄과 함께 아직 토목에 대해 아는 바도 없을 그들이 강폭과 유량처리대책 등 나름대로의 주운 계획을 적어 놓은 것이 눈에 띈다. 이제 사회에 진출하였을 그들이 낙동강 프로젝트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과 함께 회상되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의 건설, 길안에서 금호강까지의 도수로 건설, 아스원댐 등의 대역사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들은 모두 처음 제기되었을 때 주변으로부터 황당하다, 시기상조다 라고 비난을 받은 사업계획들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실현되었고, 마침내 그 때 잘 건설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역사나 큰 건설사업이 한 사람의 뛰어난 판단력과 집념, 혹은 모두의 꿈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다.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한날

개인적 희망이나 몽상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게 되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사업의 시급성

그럼 낙동강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가 살펴보자.

첫째, 낙동강의 수자원확보를 위해서이다. UN은 우리나라가 곧 물부족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낙동강 연평균 강수량이 1,188mm(전국 평균의 92.6%)로 4대강 유역 중 가장 적으며, 2011년에는 748백만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댐저수능력이 미흡하여 하천 유지수량이 부족하고 갈수기에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유역 지하채간 물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수계에 증규모댐을 건설하여 수량확보와 함께 홍수를 조절하여야 하며, 충주댐 무효 방류량을 도수하여 낙동강유역의 용수를 확보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통합 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낙동강 치수를 위해서이다. 낙동강은 유역면적이 한강과 비슷하나 홍수조절용량은 5.7억톤으로 한강의 40%에 불과하고, 제방이 부실하여 홍수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치수와 방제사업이 절실하다. 올해 여름에 있었던 고령과 김해의 강안 붕괴에 의한 홍수와 낙동강 폐논사건 등의 원인은 낙동강의 이수와 치수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부재와 투자 부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때 그때의 땀질식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낙동강의 이·치수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계획과 투자로 지역간 갈등과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연안개발을 통해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장기적으로 낙동강 강변고속도로의 건설과 주운개발로 신낙동강시대를 전개하는데 있다. 낙동강 강변고속도로와 주운 개발을 통해 물류비 절감, 교통혼잡 완화, 대기오염 저감, 관광자원 개발, 내륙도시의 해안 접근성을 제고하여 영남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 낙동강변에 영남권 내륙화물터미널이 건설되고, 이를 통해 통관이 이루어진다면 대구 경북의 수출은 더욱 용이해지게 될 것이다. 영남문화의 모태인 낙동강을 체계적인 개발로 연안지역의 문화발전을 통해 한강의 기적에서 낙동강의 기적을 창출하여야 한다.

위의 사실에서 낙동강의 개발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임 대구광역시장은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내세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환경과피를 우려한 적극적 반대에서부터 계획 자체는 인정하나 자치단체로서의 계획의 버거움, 대구시의 경계를 벗어난 공간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도 계획다운 계획하나 없

이 그냥 낙동강을 그냥 방치하자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실현 가능한 문제

이제 세계의 주요 강은 단순한 보전이나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의 환경과피의 차원을 떠나 이수나 치수나,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대명제 앞에 유역에 관계된 자치단체와 나라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 길이 2,857km로 유역면적이 중부유럽 17개국에 걸친 817,000km²인 다뉴브강은 연안국들과 유역연맹이 1994년 다뉴브강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약에 서명하고 다뉴브강 현재의 환경 수질보전을 최소한 유지하고 개선하며,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반대되는 효과와 변화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다뉴브강 연안 환경계획(1995-2005)을 추진 중에 있다. 라인강 유역국가들도 위험물 수송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벽으로 된 배로 수송하고 전문가의 답승과 위험물질 현황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업체와 도시의 오염배출에 대한 감시, 폐수 부과금 부과, 감시와 경보, 생태마스터플랜인 ICFR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낙동강을 현재와 같이 두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될 때 더 환경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낙동강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래의 낙동강권역 1,000만 주민의 물 부족 문제와 대구시의 낙동강 연안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낙동강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 프로젝트는 SOC 불분할성의 법칙에 따라 대구에서만 실시한다고 하여 효과를 낼 수 없고, 추진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낙동강의 인간개발과 환경보전차원에서 대구·경북, 부산·경남의 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예에서 보듯 낙동강 낙동강연안개발은 지금해도 늦다. 많은 노력과 협의로 유럽연합을 형성하기에 이른 그들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하루빨리 종합계획을 세워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 위와 물 아래 지역의 협력과 평화 없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으며, 그런 분위기와 자세라면 남북통일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서두를 일도 아니다. 성베드로 성당이 몇 백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듯 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협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낙동강시대의 전개라는 꿈을 대구 경북 및 부산 경남 주민이 함께 꾸다면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현실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과 인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김충환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낙동강 프로젝트의 현실화 가능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솔직히 새로운 것 없는 제안이지만, 추진과정에서 드러날 부작용이 염려스러워 못마땅하다. 사실 낙동강 프로젝트 구상이 처음 모습을 나타낸 지는 제법 지났다.

1995년 세종연구소는 한강과 낙동강을 이어줄 경우운하 건설을 제기한 적이 있다. 언뜻 기발한 발상이라 기대가 컸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지화되었다. 1996년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수계 연결 계획을 발표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진행은 계획이나 구상에 그쳤을 뿐이고, 구체적인 중앙정부 움직임은 시작된 바 없었다.

그런데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조해녕 대구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밀라노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에 힘쓴다는 한편, 낙동강 물 문제 해결, 연안개발과 레저스포츠산업 육성 효과를 얻고자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했다.

1983년 이후 대구시가 1조 5천여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시설 등을 보강한 바와 같이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조용하면서 논리적으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문제를 해결하지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셈이다. 조해녕 시장은 낙동강 프로젝트가 실현에 옮겨지기만 한다면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고,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낙동강 프로젝트는 추진과정에서 유역 자치단체와 이해갈등이 발생하고, 막대한 소요예산과 시간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에 이를 정책사안이 아니다. 최소한 기존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연구되어야 한다.

낙동강 프로젝트의 문제점

낙동강 프로젝트의 사업목표는 유수량 확보 및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이다. 신규 수자원으로 장래 예상되는 낙동강권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 유지수를 증대시켜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낙동강 유역에 맑은 물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하천 개·보수 등 치

수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홍수기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낙동강 중·하류지역 수해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 및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것 역시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다 도로교통 혼잡과 물류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륙도시의 해안 접근성을 제고하며, 낙동강 수계 자치단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로 주운에 주목한다.

낙동강 유역은 서쪽의 소백산지(백두대간), 동쪽 태백산지(낙동정맥), 남쪽 해안산지(낙남정맥)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을 이룬다. 특히 낙동강 중·상류는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한해 강수량이 1,100mm에 불과한 소우지역에 속한다. 그나마 50% 이상은 6~9월 여름철에 집중하여 내리고, 최근에는 돌발적인 강우현상이 잦아지고 있어 그 이용률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낙동강 유역은 6,500만 톤의 용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2011년에는 부족 규모가 7억 5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한강 유역의 중·상류 지역은 일년 강수량이 1,300mm를 넘는 다우지역이다. 한강 유역에는 많은 댐이 건설되어 있어 물을 가둘 수 있지만, 여름철에 기습적으로 내리는 호우를 통제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강 하류의 수도권에는 2천만 명에 이르는 대인구가 거주하며, 각종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용수소비량도 엄청나다. 따라서 2011년에는 7억 3천만 톤, 2020년에는 11억 5천만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낙동강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영남과의 물 분쟁 불씨를 갖고 있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생태환경 변화이다. 취수댐 건설 지점 하류방향의 하도는 많은 유수량을 잃어버려 수심이 낮아지고 유속이 느려져 습지로 변한다. 건강한 하천 생태계는 수심과 유속이 다양하여 하상의 구성물질이 풍부하고, 그곳에서 서식하는 생물종이 어우러진 생태계를 말한다. 그런데 하천이 습지로 변하면 하천 생태계에서 살아가던 생물종이 습지생태계의 종으로 대체되어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유속이 빠른 깊은 물에서 살아가는 어류 등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하천 골재를 채취하면 하천 내 하중도와 강 양안의 모래톱이 모두 제거되어 단순화된다. 유속과 수심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여울과 소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은 파괴되어 모두 여울로 변한다. 따라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단조로워짐으로써 종 다양성은 감소하고, 하천 연안의 모래톱과 주변의 갈대, 버드나무 숲이 남지 않아 하천의 영양소가 주변의 토지로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못하는 탓에 하천 자정능력이 감소한다.

대안적 방법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관개와 관정을 개발하고, 산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며, 그리고 청결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 소비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강수량 변화 없이 기습호우의 증가로 나타나는 강우체계의 안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중위도권의 우리나라에서 물 공급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댐 건설을 통한 강우의 저장은 물 생산에 비중을 둔 접근이며, 도수로를 통한 물 끌어오기는 분배에 비중을 둔 방법이고, 증수도는 소비에 비중을 둔 해결책이다.

세계적으로 가뭄이 유명한 사해지방의 사막화 해결 방법으로는 빗물을 모았다가 식수로 사용하며, 식수가 모자랄 경우에 상수도를 이용하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 지붕의 빗물을 모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쌀 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많은 용수를 필요로 하는 논을 일시적이거나 밤으로 전환하여 물 소비를 줄이는 농법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실 대구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저부가가치형 생산체제에 머물고 있다. 대구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섬유산업은 전통제조업으로 향후 경제발전을 주도할 지식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섬유, 의류 분야가 지니는 지역적 상징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하되 기계, 메카트로닉스 산업과 생물산업 등을 대구의 1차 전략산업, 정보통신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산업, 자동차산업을 2차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제 우리 대구는 새로운 경제발전 방향과 산업유발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특단의 대안과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낙동강 프로젝트에 매달려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고급인력을 소모시킬 여유가 없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구를 세계 속의 중심도시 우뚝 세우고 동북아의 전략산업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해녕 시장과 인재들이 마음을 열며 어깨를 맞대어서 새로운 도시건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대구청소년문화센터 우리세상

문화운동 모임

지역 청소년문화운동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가 하면, 갖가지 공연도 끊이지 않는다. 비야흐로 메말랐던 도시에 힘찬 박동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앞장서 이끌어 가는 단체가 「대구청소년문화센터 우리세상」이다.

「우리세상」 구성원들은 항상 환한 모습으로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애쓰고 함께 호흡한다. 부지런히 뛰어다녀 마당을 만들고, 가끔 철없는 아이들 놀음이라 외면하는 기성세대가 있으면 가까이 끌어당겨 달리 눈뜨게 한다. 안미향 대표는 이러한 활동을 이끌어간다.

남산동에 위치한 「우리세상」 사무실은 작고 아담하지만, 몹시 분주하다. 자원봉사자와 학생들이 바빠 움직이니 생기가 넘친다. 차 한잔 함께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여유조차 없을 정도이다.

안미향 대표가 청소년문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특이하다. 여고시절 당시에는 시문학동호회 활동으로 감성을 가졌다고 한다. 대학가서는 건축을 전공했으나,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가 보다. 오히려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를 계기로 새로운 영역과 인연이 닿았다. 청소년문화운동이었다.

현장공연

1989년 독지가에 의해 설립된 그 조그만 도서관은 네 사람이 어울려 출발했다. 안 대표도 함께 참여했다. 선배들의 영향이 컸다. 한 해 뒤 청소년도서관으로 개칭해 5~6년을 운영하였고, 1996년에 이르러 「대구청소년문화센터」라 이름짓게 된다. 남산동에 자리잡은 지는 불과 일년 남짓 지났는데, 초창기 멤버들은 시민단체로 옮겨갔다고 한다. 지금은 설립살이가 늘어 상근직원과 자원봉사자 열댓 명이 꾸려나갈 만큼 자리잡았다.

「우리세상」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독특하다. 흔히 접하게 되는 동아리나 토론모임을 갖지 않는다. 그 대신 현장공연을 주로 한다. 풍물, 랩, 연극, 영상, 수화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요즘 시내 중·고등학생들을 모아 국채보상공원에서 주말공연하면 호응이 대단하단다. 순식간에 수십, 수백 명이 모여든다며 자랑이다.

「우리세상」이 이처럼 동아리나 토론모임 대신 현장공연을 고집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뚜렷하다. 사실 서너 해 전부터 청소년들의 성향변화를 감지하고서 무척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새롭고 독특한 문화활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였던 셈이다. 지금의 현장중심 프로그램은 그러한 흐름에 어울리도록 접근을 전환한 결과 채택된 것이다. 다행히 지역 학생 문화모임 수가 수백 개에 이르고, 각 학교와 협조도 원만하게 이루어져 큰 어려움은 없단다.



기쁨을 주는 삶'

안미향 대표를 비롯한 「우리세상」 사람들은 항상 고맙고,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한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그저 기쁘고 즐겁단다. 그러면서 지역의 달한 관행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는다. 우리 대구의 환경이 청소년 문화역량, 사고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매장시킨다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어린 학생들이 문화적인 몸놀림으로 불만을 잊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며 행복한 표정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잠시나마 흥을 돋궈주고 고민을 씻어주는 놀이, 공연, 출판에 호기심이 많다. 접하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한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더 바빠진다. 문화캠프나 문화강좌를 열면, 열기가 가득하다. 연극·영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해 워크샵이 준비되고, 전통가락이 흥미로운 학생들에게는 풍물전문가를 댕어준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스스로 찾아와 알찬 시간을 보낸다. 그곳에는 소용이 있으니 막힘이 없단다.

그토록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두루두루 힘 보태는 단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도움을 줄 뿐 다른 조직은 두드러진 교류가 없다고 한다. 뜻밖이었지만, 지금까지 내부적인 능력 기르는데 열중해서 바깥 네트워크 구축의 경우 시급하지 않았고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솔직히 아직 절으니 무슨 일이든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은 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 정립하는데 힘이 들어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넉넉지 못했으리라 짐작되었다.

안 대표는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부모님의 영향을 강조했다.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특히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정의롭게 살라는 가르침이었다고 한다. 이제 그 뜻을 되새기며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 주는 삶을 살고자 애쓴단다.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내면의 당당함을 갖추도록 자주 이른다.

우리세상

「우리세상」 식구들의 꿈을 물었다. 대구청소년문화센터가 펼쳐나갈 사업내용을 듣고 싶어서다. 우선 사단법인화를 서둘러야겠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식적인 관계에서 걸림이 많은 모양이다. 교사들과 뜻을 모아 교육사업을 벌이는 것 역시 구상 가운데 하나이다. 기존의 단순한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학습, 체험 병행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둘러야 할 분야는 자료화적업이란단다. 이곳저곳에서 청소년관련 자료를 요청하지만, 경험이 축적되었을 뿐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도움주기 어려운 실정인 탓이다. 그리고 예순 번째 발간이 가까운 소식지 「우리세상」을 더 알차게 꾸미는 것, 결코 작지 않은 바램이다.

마음의 면류관



김규련
영남수필문학회 회장
형상수필문학회 회장
국제펜클럽 회원

아침을 열고 산책을 나선다.

은혜로운 긴 밤의 휴식으로 모든 사물이 새로워졌다. 나는 어느 때와 같이 대구 공대 교정을 행해 걷고 있다. 이년 전만 해도 집 근처에 있는 학산을 오르내렸다. 허나 이제 무릎에 부담이 와서 평지를 선택하게 됐다.

교정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다. 어슬렁 어슬렁 걷는 사람, 뛰어나가는 사람, 팔 다리를 흔들며 나무에 등을 치는 사람, 저마다 자유로워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온다.

나는 흠날리는 낙엽을 밟으며 교정을 두어 바퀴 돌고 있다. 교정은 공원처럼 조경관리자가 뛰어나게 잘 되어 있다.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많은 수종의 나무들이 뿔뿔히 서 있고 뜻 깊은 비명(碑銘)이 새겨진 바위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다. 청기외에 단청 곱게 입혀진 팔각정이 한 녀에 솟아 있는가 하면, 작은 연못에는 수시로 분수가 차 오른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정을 개방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한 학교당국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소요를 즐기고 있다. 이곳에도 자연의 사계는 어김없이 찾아와 만물이 끊임없이 바뀌고 또 바뀌는 모습을 보여 준다.

나는 교정을 돌면서 봄에는 섬진강변의 들꽃을 보았고, 여름에는 조계산의 수림을 느껴보고, 가을에는 설악산의 단풍을 떠올렸으며, 겨울에는 한라산의 설경을 그려보곤 했다.

보여 주는 것이 어디 걸모습 뿐이라, 그 속에 숨어 있는 섭리의 묘리(妙理)도 함께 보여 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겸양 없는 권세, 하심 모르는 지위, 나눔 없는 부, 겸손 모르는 학식이 어느날 갑자기 파멸했을 때 비로소 깨닫고 뉘이치고 통곡하는 개인과 단체와 권력도 많이 봐왔다.

문득 인생의 사계가 떠오른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서성거리고 있을까. 어쩌면 깊은 가을의 끝자락을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황량한 설원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에게는 식욕, 수면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등 오욕이 있다고 한다. 고희를 넘기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노·병·사, 영·고·성·쇠를 보고 또 보고 배워서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 해탈을 조금씩 익히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칠순을 넘긴지도 이미 오래인데 늘 마음 조심을 해야 하니 말이다. 부끄럽게도 나는 아직 오욕에서 자유롭지를 못해 때때로 망상과 번뇌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니 스스로 한심하다. 그래서 늘 참선과 수행과 기도를 생각하게 된다.

말은 쉬워서 그 까짓 오욕 품은 놓아버리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면 되잖아 한다. 이제 성욕, 명예욕, 재물욕은 깨끗이 버렸다고 자부할 때도 있다. 현대도 그 욕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가슴 저 밑바닥에 숨어있다가 절호의 때를 만나면 다시 불길을 집히려고 살금살금 타오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진정 자괴를 금할 길이 없다.

교정을 이리저리 살피며 또 한 바퀴 돌아본다. 나무며, 바위며, 시설물들이 외물로 존재했을 때는 입을 꼭 다물고 묵언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돌연 내 마음 속으로 수용되면서 오랜 침묵을 깨고 저마다 말을 하기 시작한다.

바위들이 만년을 지켜온 무언의 설법을 열기 시작한다. 그들의 환구는 나의 영혼에 잠언으로 다가온다.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 보라는 시금, 들리는 소리 보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더 경청하라는 청감, 사람의 길흉 화복이 한 입에서 비롯됨으로 말을 아끼고 신중하라는 언감, 풍요와 안락 편리와 신속을 얻으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잃은 줄도 모르고 잃어버린 너 자신을 찾아 움직여 보라는 동감, 이렇게 네 잠언을 듣고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비로소 철이 좀 든다고 할까.

아침 공기가 차갑다. 한 줄기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꽃날이 생생하다. 도서관 앞에 왔을 때 숲 속에 서 있던 큰 바위 하나가 소리친다.

“지도자는 마음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야 한다.”라고 나는 서민이기에 상관이 없는 말이다. 그러나 면류관이 찢이기에 바위가 다 소리치는가. 호기심이 불쑥 일어난다.

면류관은 옛 제왕들이 머리에 덮어쓰던 관이 아닌가. 면류관은 걸 색깔이 검고 안쪽은 붉다. 국태민안을 위해 안으로 피가 펄펄 끓는 정열이 넘쳐도 겉으로 평상심으로 태연하다는 계명이 숨어 있으리라. 입으로는 나라와 겨레를 위하고 안으로 욕심을 품고 온갖 욕심을 쟁기는 것과 그 상징하는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관 위에는 장방형의 평평한 판이 놓여 있다. 고대 왕들의 관에 달린 출자(出字)형의 금 장식은 없다. 계왕의 오만과 아집과 독선은 곧 과멸을 부르고 평등심으로 백성과 고락을 함께 할 때 나라가 부강해 진다는 교훈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어디 그 뿐인가. 면류관 앞에는 옥을 쥔 줄이 열 두 가닥 드리워져 있다. 이것을 면류계 목이라 한다던가. 면류관의 옥줄이 눈을 가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사람의 털끝만한 흠이나 하찮고 자질구레한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과 아직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은 일까지 밝게 봐야 한다는 것이 다르다.

면류관에는 양쪽으로 귀에 닿을 만큼 늘어 달아 맨 누런 솜 방울이 있다. 이것은 주장색이(註壙塞耳)라 했다. 이것 역시 두 가지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한다. 측근자들의 사곡된 말과 참소를 듣지 않기 위함이고, 그러면서 아직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소리까지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란다.

벌써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야 겠다. 오늘은 부질 없는 생각이 많았다. 서설이 오시려나, 구름이 모여들고 있다.



하얼빈

문무학

우리네 가슴속이나 우리들 역사책에는
 하얼빈에 의사 안중근 우뚝 서 있지만
 그곳에 지금은 없다 안중근도 그 흔적도.
 역사는 헐리고 철길은 따로 뻗어
 이름 모를 나무 이파리 무심히 흔들리고
 땡하니 바람만 분다, 하얼빈 그 역터,
 평화를 염원하며 남의 땅에 부린 피
 그 흔한 비석 하나 새겨두지 못해도
 하얼빈 그 땅 깊숙히 조선의 맥박이 뛰다.
 흔적없는 역사를 증언하기 위하여
 오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허전한 가슴속으로 시린강이 흐른다.

영남일보 논설위원
 대구시조시인협회장
 △〈달과 늑〉, 〈병어리빠꾸기〉의 다수



다시 보는 대구 선거사

-제5대 국회의원 선거-

김 일 수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선거인 제헌의회 선거 이후 우리는 주기적으로 선거를 경험하고 있다. 그 가운데 4·19 직후인 1960년 7월 29일에 민의원 233명, 참의원 58명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제5대 총선거는 역대 선거에 대비되는 기억할 만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4·19 공간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합법적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었고, 민주당 대 혁신정당 중의 하나인 사회대중당의 대결로 압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에서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민주당의 바람이 거센 가운데 사회대중당이 원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시켰기에 선거전은 불꽃이 뿜 만큼 첨예하였다. 여기에서는 당시 혁신세력 중 가장 세력이 컸던 사회대중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대중당의 창당에서 출발까지

사회대중당은 1960년 5월 12일 발기대회를 거쳐 6월 17일 삼일당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4월 혁명의 원수와 국토통일의 실현과 민주적 복지 국가의 건설을 역사적 과업으로 제시한 발기문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사회대중당은 스스로를 보수당과 대결할 일대 혁신정당으로 간주하였다. 사회대중당은 과거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의 지방조직

을 이용하여 지구당을 결성해 나갔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6월 15일 대구에서는 사회대중당 경북도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반보수정당 전선의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진보당계·근민당계·민혁당계·한독당계 등 모든 혁신세력이 총집결되었다. 이 자리에서 사회대중당의 성격이 민주사회주의의 정당이며, 그것은 노동자·농민·인텔리·중소상공업자 등 광범위한 근로대중의 권익을 위해 독재와 자본의 힘과 대결하는 정치세력임이 주장되었다. 또한 '4·19혁명으로 제기된 민주과업은 사대당에서 담당해야 한다'거나 '과거 몇 번인가 씨가 뿌려졌던 혁신운동은 김구·조봉암 등의 예와 같이 싹도 트이기에 전에 총탄에 쓰러졌으나 이제 뿌려질 혁신의 씨가 거여 성장해서 결실될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사회대중당 경북도당의 조직 체계는 중앙당과 같이 보수당의 정당 구조를 지양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의 11인 총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선전·재정·홍보·당무·조직 등의 위원회 및 선거대책위원회·인권옹호위원회 등을 두었다.

사회대중당 경북도당에서는 대구지역 6개 선거구에 당내 주요 인사와 대구의 유명인사로 공천하였다. 곧, 갑구에는 대구매일신문 주필로서 '학생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는 사실을 빌미



로 일어난 필화 사건의 주인공인 최석채, 울구에는 1950년대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을 이끌었고, 사회대중당의 대표총무위원이던 서상일, 병구에는 1950년대 말 전국반독재 민련 중앙조직부장과 민권수호국민총연맹 중앙조직부장을 지낸 김수한, 정구에는 대구대학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양호민, 무구에는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 마 있고, 진보당과 민주혁신당 그리고 사회대중당의 감영·정책을 기초했던 혁신이념의 이론가인 이동화, 기구에는 대구의 유일한 여성후보로서 구진보당계의 사회대중당 경북도당 당무위원장인 이영옥을 각각 출마시켰다.

사회대중당의 선거 공약을 보면, 4월 혁명의 완수, 통일방안, 계획경제와 자유경제를 혼합한 경제와 계획성 있는 경제체제의 확립, 농업정책, 복지정책, 교육·문화정책 등을 내어놓았다. 그렇지만 사회대중당의 선거 공약은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당·민주당의 과거 정치 형태 등 보수적 한계를 폭로하는 공세에 치중하였다.

당시 이상두가 논설위원으로 있던 영남일보의 경우 사회대중당의 정치노선을 보수정당인 민주당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획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함으로써, 투표자들에게 사회대중당의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 서동진(갑), 황봉갑(을), 임문석(병), 조재천(정), 조일환(무), 장전모(기) 등이 출마하여, 전국에서도 가장 치열한 선거전에 임하였다.

통일방안이 쟁점이 되어 용공시비가 일다

7·29선거 당시 통일방안은 선거 선전전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한국의 혁신

정당이 통일방안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과 4·19운동이 민주운동에서 통일운동으로 확대된 것과도 깊이 관련되었다. 특히, 대구 무구의 민주당 후보 조일환이 사회대중당의 통일방안이 북한의 그것과 동일하다며, 사회대중당을 '용공정당'으로 단정한 것에서부터 점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회대중당의 경우 통일방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여러 안이 후보들로부터 제시되었는데, 대구의 경우 서상일 및 최석채 후보가 "유엔 감시하 총선거안과 북한의 중립국감시안과 절충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유일한 방안"이며, 북한과의 경제·문화 및 인사 교류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름다운 꿈이기는 하나 전쟁상태라는 한국의 현실성을 도외시한 망언"이라며 비난하면서, 용공성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통일방안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자 검찰 당국이 그것에 대해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대해 사회대중당은 즉각적으로 송남헌을 통해 관권의 혁신세력에 대한 고의적 압력이라고 단정하고, 당국에 엄중 항의하였다. 또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서상일은 "7·29선거는 한국의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거이기에 공명선거가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공성을 불러일으키는 고루한 보수세력의 비열한 행동을 단호히 배격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자신의 정견을 담은 선거 인쇄물에서도 사회대중당을 빨갱이로 모는 것은 보수당의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대중당은 피학살자 위령제를 이용하다

정구에 출마한 양호민은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



의 조재천 후보를 공략하기 위해 피학살자 위령제를 선거 전술로 사용하였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때에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여러 곳에서 수많은 인명이 인민군과의 연계를 차단한다는 명목하에 예방차원에서 학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4·19시기에 경북피학살자유족회가 발족되어, 학살현장의 발굴과 위령제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갔고, 사회적 여론이 높았다. 이러한 피학살자 사건을 사례로 하여 양호민은 한국전쟁 당시 경북 지사였던 조재천이 양민학살에 가담했다고 공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재천이 사회대중당 갑구 후보인 최석채가 한국전쟁 당시 경북 도경 사찰과 과장이었던 사실을 들어 반격하였다. 이에 사회대중당은 양민학살의 쟁점화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일단 공격의 고비를 늦추었다. 게다가 피학살자 위령제에 참석한 청중이 5백 여명에 불과해 오히려 대회 주최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사회대중당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선거의 쟁점화를 시도했으나 충분한 사전 조사나 면밀한 예측을 못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사회대중당의 참패, 민주당의 압승

대구에서의 총선 결과는 선거 초반 예상과는 달리 사회대중당의 참패와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선거 초반 사회대중당은 경북에서만 20석 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서상일은 전국에서 3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에 따라 대구지역에 혁신이 봄을 일으키고 있다거나 보수와 혁신간에 벅찬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종반에 다다르자 사대당은 경북 지역에서 10석만 확보해도 큰 성과라 하였고, 박

기출은 전국에서 20석을 확보했으면 하는 희망을 나타냈으며, 혁신계 전체로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회대중당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당선 가능한 의석을 줄여 잡을 정도로 초반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다.

7·29 총선거 결과 사회대중당은 대구에서 을구의 서상일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보아도 사회대중당은 민의원에 4명, 참의원에 1명 등 5명만이 당선되었고, 정당단체별 의원후보자 득표 상황에서 전체 9,077,835명에서 불과 6%를 확보하였으며, 정당단체별 의원후보자수 대 당선수 비율에서는 121명에 4명이 당선되어 겨우 3%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보수와 혁신의 대결로 선거사에 있어 초미의 관심 아래 진행되었던 7·29선거는 보수정당의 압승으로 마감되었다.

대구의 선거 결과를 보면, 을구의 서상일은 15,348표를 획득하여 11,662표를 얻은 민주당의 황봉갑 후보를 3,68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나머지 선거구의 경우, 갑구의 최석채는 7,530표를 획득해 21,208표를 얻은 민주당의 서동진에게, 병구의 김수한은 5,818표를 획득해 20,750표를 얻은 민주당의 임문석에게, 정구의 양호민은 11,610표를 획득해 31,672표를 얻은 민주당의 조재천에게, 무구의 이동화는 7,152표를 획득해 22,772표를 얻은 민주당의 조일환에게, 기구의 이영욱은 2,506표를 획득해 11,207표를 얻은 장전모에게 각각 완패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대구의 언론계에서도 의외의 사태로 받아들일 만큼 충격적인 일대 사건이었다.

**대구의 높은 보수의 벽을 넘지 못한 사회대중당**

그것은 4·19 직후 대구의 정치 성향은 전국 어느 도시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서 신문구독률이 높고, 교육 정도가 높으며, 공장 노동자 및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농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도시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대구는 한국전쟁 당시 비점령지역이기에 좌익이 다른 지역에서처럼 제거되지 않았다고 언급되었다.

또한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당시 진보당 후보였던 조봉암은 자신이 얻은 2백만표 가운데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유효투표율을 기준으로 44.7%에 해당하는 501,917표를 얻어 최고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북의 39.8%, 경남의 73.7% 등에 비해 높은 득표 비율이었던 것이다. 실제 이런 점 때문에 7·29총선거에서 혁신정당이 선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예상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은 참패하였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먼저, 참패 원인을 외적 요인에서 찾는 경우이다. 첫째, 사회대중당의 형식적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이다. 곧 정식으로 창당을 하지 못한 사대당이 선거에 임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둘째, 사대당의 선거 자금과 조직의 열세를 지적하면서, 강한 지역 연고주의로 인해 타지방 출신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 둘째의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이 박약하다고 지적하는 경우이다. 유권자의 정치의식의 낙후성은 일반 사회와 언론 및 혁신계에서 동일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대구에 출마한 사대당의 후보들은 당내 주요인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패한 것은 그

만큼 충격이 더 컸을 것이다. 더구나 대구는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 지지표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또 좌익에 대한 반정부 감정과 정치 성향이 높은 도시로 알려진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였다.

그리하여 낙선한 대구의 사대당 후보들은 선거를 진행하면서 대구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그리 높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곧 양호민은 “그러나 보수의 벽은 두텁고 강했어요. 혁신을 외치는 목소리는 컸지만 수요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이동화는 “민중의 정치의식 수준은 생각보다 높지 못해 당선은 무리였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에 대해 “4월 혁명을 짓밟은 사람들의 승리”라고 간주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대중당의 내적 구조에서 참패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대중당의 정책 중 통일론이 용공성 시비를 불러 일으켜 선거에 역작용을 초래했다. 유권자의 관심이 국내 민주주의의 달성과 사회 복지 확립에 쏠려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통일 방안이 용공성을 야기하는 한편 유권자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혁신정치 세력의 비혁신적 형태이다. 혁신 운동이 혁신적 인물답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정치인들에게는 정강정책의 바탕이 되는 사회과학적 이론이 박약할 뿐 아니라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정당의 영도력 결핍은 민주사회주의의 지향성을 대중들에게 호소하지 못하고 자유당이나 민주당의 구태악습을 폭로하는 수준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대중당은 혁신정당의 정치적 기반이 되어야 할 근로대중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거나 사회·경제구조를 사회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는 데



앞장서지 못했다. 물론 서상일은 당시의 한국 사회의 역사적 과제를 경제 해방으로 설정하고, 윤길중 또한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긴 했으나 정작 선거에서는 통일방안 논쟁, 당원끼리의 반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대중당은 노동자·농민 등 근로대중을 지지 기반으로 설정하지 않고 보수 정당과 마찬가지로 중산층을 주요 득표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노동자·농민 등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는 혁신정당의 성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7·29총선거에서 사회대중당이 참패하게 된 주요 요인은 외적 요인으로 선거 자금과 조직력의 결핍, 유권자의 정치의식의 낙후성 등을 지적할 수 있고, 내적 요인으로 후보들의 명확한 이념 제시 부족과 정치 감각의 부재, 내부 분열과 대립, 근로 대중을 등한히 한 것과 경제 개혁 방안 부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때문에 '혁신세력은 혁신되어야 한다'는 반성이 촉구되었던 것이다.

선거 책임론으로 인해 사회대중당 분열되다

7·29 총선거 이후 사회대중당은 선거 참패로 인한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선거 직후 사대당은 다른 혁신정당과의 재편을 통한 혁신세력의 통일보다는 사회대중당을 중심으로 한 혁신운동의 확대 강화를 꾀했다.

그러나 선거 패배의 원인을 밝힌다는 명분 밑에 책임 소재를 밝힌다는 구실을 들어 상대 진영의

해당행위를 들추게 됨으로써 내분이 재연되었다. 그것은 서상일을 중심으로 하는 비진보계는 김달호를 중심으로 한 진보계의 대립이었다.

이러한 사회대중당의 분열에 대해 7·29총선거에서 혁신세력에 우호적이었던 대구지역의 영남일보는 동당에 대해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여러 개인 괴물에 비유하는가 하면, "적에 대해서 가장 비겁하고 내부끼리는 가장 용감하다"거나 "社會大衆黨은 정당의 假飾(가식)에 이루어진 烏合之衆(우합지중)의 집단이었고, 각종 정치세력의 진열장이었다"고 격렬히 비난하였다. 이후 사회대중당은 독립사회당, 혁신당, 등으로 사분오열되었다.

이와 같이 제5대 총선거는 보수와 혁신의 구도 아래 진행되어 한국현대 선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인들은 4·19를 통해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지만 혁신세력에게서 원내 정치활동의 공간을 마련해 주지는 않았다. 특히 1956년 대통령 선거, 1960년 2·28민주운동, 4·19혁명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대구지역에서 혁신정당의 참패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의 정치 의식 및 선거 성향에서 보수성은 군사쿠데타 이전에도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지역 유권자의 야누스적인 정치성향, 그 중 여전히 두터웠던 보수의 벽, 그리고 사회대중당의 정당으로서의 미성숙한 정치 역량 등이 사회대중당의 참패와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최후의 유리천장, 여성대통령

김명희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6·13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얼마 전에 끝난 대선에 이르기까지 2002년은 유난히 선거가 많은 한 해였다. 그 사이 여성의 정치적 역량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여성계는 2002을 '여성정치'의 원년'으로 삼고자 정치관계법 개정예 한 목소리를 내었다. 대선과정에서는 여성연대 결성 및 대선후보 초청 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방선거와 대선이라는 큰 물줄기 속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3 지방선거 결과 여성 당선율은 기초단체장 0.9%(2명), 광역의원 9.2%(63명), 기초의원 2.2%(77명)에 불과했다. 199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볼 때, 50%가량 증가한 것이지만 전체 당선자의 3.2%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는 유엔의 권고수준인 30%는 물론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13.8%에도 훨씬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지방선거에서의 낮은 여성 당선율과 한 명의 후보자도 내지 못했던 대통령선거 과정은 여성계의 바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직장에서 여성의 고위직 승진이 힘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차별인 유리천장(glass ceiling) 때문이듯이 정치영역에서도 어김없이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권력이 있는 곳에 여성은 없다

근대 여성 정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시점은 1947년 루마니아에서 여성 외무장관(아나 파우게)이 탄생하면서부터라 한다. 이후 20세기 동안 전세계적으로 1천 2백여 명의 여성 정치지도자들이 탄생했고 이 추세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1980년 미국의 정치학자인 엘리자베스 벨란스가 '권력이 있는 곳에 여성은 없다'라는 말로 미국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표현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는 대통령의 '조용한 조력자' 자리를 거부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지지하는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퍼스트 레이디 힐러리 클린턴의 활동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퍼스트 레이디에서 물러난 지금 그녀의 공식 직함은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이다. 각종 신문보도에서는 그녀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유력하며, 어쩌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그녀는 권력의 핵심부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성공한 여성정치인의 상징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정치



지도자인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에 여성이 10여명에 이른다. 미미한 변화이긴 하지만 여성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여성대통령? 물론 없었다. 그렇다면 여성대통령 후보는 있었을까. 역대 대선에서 여성이 후보로 출마했던 경우는 13대 대선에 출마했던 홍숙자씨와 14대 대선에 출마한 김옥선 후보 2명이 있을 뿐이다. 엄밀히 말해 홍숙자씨는 출마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여성대통령 후보는 1명에 지나지 않았다. 거의 반세기라는 여성의 참정권 행사 역사에서 겨우 한 명이다. 이쯤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권력이 있는 곳엔 여성들이 없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뜨거운 감자, 박근혜 논쟁

그러나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20대 이상 여성유권자 3명 중 1명이 향후 10~20년 사이에 여성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깨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결되기는 했지만 최초로 여성이 총리에 지명되었고,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로서 박근혜의 행보가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를 상회하며 대통령 후보 출마설이 제기되던 박근혜의 정치적 행보는 여성계 내에서 박근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여성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박근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차제에 여성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현시기 대권에 가깝게 있는 여성은 박근혜 뿐이다' 등 주로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다. 반

면 박근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후광 밖에 볼 것이 없다', '기존의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등 여성대통령으로서 박근혜의 차별성에 회의를 나타내었다. 오랜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얼룩져온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여성대통령'은 분명 가슴 설레는 일이지만, 그녀가 우리 사회 가부장의 표상이랄 수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자 본의든 아니든 아버지의 후광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상생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여성정치 지도자

조기숙 교수는 여성수반들의 리더십 유형을 아버지나 남편의 후광을 받고 지도자로 인정받은 '대리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정치판에서 뼈가 굵은 '자수성가형', 높은 교육수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고위직으로 뒤통을 입문한 '외부자형' 네 가지로 분석하였다. 대리자형은 정치가 미발달된 곳에서 주로 발견되는 지도자 유형이다. 남편의 대리인으로 정치에 입문한 필리핀의 아키노, 니카라과의 사모로는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유약한 지도력으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아버지의 뒤를 이은 인도의 간다나 파키스탄의 부토는 아버지를 닮아 남성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수성가형은 영국의 대처나 이스라엘의 골다메이어와 같이 전쟁도 불사하는 남성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외부자형은 노르웨이의 부른틀란트와 아일랜드의 로빈슨 대통령이 속한다.



그에 따르면, 이들 여성지도자 중에 21세기가 요구하는 통합의 지도력은 주로 외부자에게서 발견된다. 그 이유는 남성으로부터 정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걸 모습 때문에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통합과 상생의 정치력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그 비교우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되새겨 볼 만 하다.

영부인도 자격이 필요하다

여성대통령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은 영부인이다. 영부인이 선출직도 임명직도 아니지만 대통령의 옆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 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8명의 영부인이 있었지만 그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나를 찍는다면 하나 값으로 둘을 얻게 될 것"이라며 힐러리의 역할과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클린턴과 같은 식견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 같다. 『영부인론』을 펴낸 함성득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부인들이 나라의 안주인이자 대통령의 조용한 내조자이기를 바랐다"고 한다. 실제로 그의 "영부인 역할에 의한 분류"에 따르면 정도를 달리 했지만 역대 영부인들은 '조용한 그림자형 내조'의 역할에 머물렀으며, 미국의 엘리노어 루즈벨트나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완전한 동반자로서의 참여형'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래 가능형으로 남아 있을 뿐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영부인의 자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영부인에게 많

은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부 여성단체는 "후보자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소신과 자질이 부족할 경우 표를 찍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대통령 후보의 부인들도 당선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퍼스트레이디 프로젝트구상'을 밝히고 검증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통령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부인, 특히 여성정책에 관한 한 대통령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음을 나타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우리 국민들이 요구한 영부인상은 나라의 안주인으로서 대통령을 조용히 내조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성권익이 신장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요즘 국민들이 요구하는 영부인상 또한 바뀌고 있다. 한 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원하는 대통령 부인상은 옥영수 여사와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을 합친 모습이라고 말한다. 현모양처의 전형인 '내조자' (helpmate)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정치적 동반자'의 역할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중성'이 엇보이긴 하지만 스스로의 영역을 개척하며 정책적 조언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영부인 상의 추구가 주목할 만하다.

여성정치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세계적으로 뛰어난 여성정치인이 배출되고 있는 지금, 우리도 '여성'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여성정치지도자를 기대한다. 상생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유리천장을 깨어나



같은 여성정치지도자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정치를 남성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고, 여성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정치구조도 변화시켜야 한다. 정책결정권을 쥐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와 검증도

필요하고 여성의 정치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여성정치인에 대한 편견을 분식시키고, 이들의 등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정치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힐러리의 성공!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일 수 없지 않은가?



- 2002. 10. 10 이양자 이사(법태평양 동남아시아 여성협회 대구지부회장) 연합회 체육대회 주관
- 10. 18 「2·28의 햇불」 8호 편집위원회 개최(사무처)



- 10. 21 홍종흠 공동의장 문화교류차 불가리아 방문
- 10. 25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이사장 나학진) 민주영령 추모제
- 10. 26 최용호 이사(경북대학교수) 학술교류차 유럽방문
- 10. 30 대구 5월회 이수광 회장(본회갑사) 10월 월례회 개최
- 11. 4 홍종흠 공동의장 학생의 날 기념 2·28대구학생운동 특강



- 11. 7 조해녕 공동의장(대구광역시장) 전국지방분권운동 창립대회 참석
- 11. 9 최용호·최만기 이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2 추계학술발표대회 참석
- 11. 9 조해녕 공동의장(대구광역시장) 대구선수단 격려차 제53회 전국체전 참석(제주도)
- 11. 12 홍종흠 공동의장 의장단회의 주재(사무처)
- 11. 15 최만기 이사(산업경영기술연구원장) 2002년도 대구경북지역 심포지엄 개최
- 11. 17 홍종흠 공동의장 제63회 순국선열의 날 추념식 참석
- 11. 18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상임위원 정책집행위원 조찬회 개최(뉴 영남)
- 12.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구지역 민주인사 초청 간담회(동대구 관공네)
- 12. 5 조해녕 공동의장 지방분권 국제심포지엄 참석(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12. 18 제3차 의장단 및 각분과위원장 연석회의(토담길)
- 12. 30 홍종흠 공동의장 문화교류업무차 중국 출장

◆ 결혼을 축하합니다.

- 2002.10.19 손도자 이사 장녀 결혼
- 11.10 박재건 편집위원장 차녀 결혼
- 12. 7 신순철 이사 아들 결혼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2002.12.19 대구지방보훈청 양춘식 선양계장 별세
- 12.27 김태일이사(영남대 교수) 조모상

알림

2003년도 정기총회

- 일시 : 2003. 1. 18(토) 오전 11:30
- 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 2·28 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요망합니다. 문의 : (053) 943-0228

高 慶 脈 巖

2 · 28의 햇불



경북중 · 고등학교 42회 동창회

회장 : 감수균, 총무 : 김양보

706-82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560-4(2층)

☎ 053)746-4002 FAX : 053)746-4003 <http://cafe.daum.net/42sarang>

Dream with DAEGU BANK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



우리고장 우리은행

대구은행 DGB